

일본 정치권의 독도인식과 우리의 대응전략

김 영 필 *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 III. 일본 정치권의 독도인식
- IV. 우리의 대응전략

I. 들어가는 글

1. 동북아 위기의 핵심으로 부상한 일본

2011년 연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시작된 동북아 지역에서의 권력교체가 2012년을 정점으로 2013년 초까지 한반도의 남과 북을 비롯하여 주변 4대강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에서 차례로 권력의 이양과 연장 또는 교체가 이

*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석사, 가나자와(金澤)대학 박사, 현 한일평화위원회의 사무국장, 한신대, 국민대 출강.

** 본 논문은 필자의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논문과 『독도관련 주변국들의 정책실태 조사와 한국의 대응방안』 논문을 수정 가필한 것임.

루어졌다.(〈표 1〉 참조)¹⁾

〈표 1〉 동북아 지역 권력교체 일지

일시	국가	권력교체의 내용
2012. 03. 05	러시아	푸틴 총리, 대통령 당선 푸틴, 대통령에 세 번째 취임(2012.05.07)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총리취임으로 역할 바꾸기
2012. 04. 11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취임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2011.12.30)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2012.04.13)
2012. 11. 07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시작(2013.01.21)
2012. 11. 15	중국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취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2013.03.14)
2012. 12. 16	일본	자유민주당 총선 대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 취임(2012.12.26)
2012. 12. 19	한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3.02.25)

출처 : 김영필, “동북아 위기와 일본의 선택”,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2013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2013. 4. 24), p. 67.

특히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한 정권이었던 민주당 정권이 지난 연말의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²⁾를 기록한 이후, 초강성 우익의 아베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주변국들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이 동북아에 있어서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지난세기의 제국주의적 속성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영토문제는 특히 그렇다. 러시아와의 북방 4개 섬 반환을 둘러싼 갈등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공격적 측면에서 나타난 갈등의 양상이고, 센카쿠(尖閣) 제

1) 김영필, “동북아 위기와 일본의 선택”,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2013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2013. 4. 24), p. 67.
2)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체 480석 중 57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자민당은 294석을 얻어 정권에 복귀했다. 한편 2009년 8월 30일에 실시됐던 전회 총선거에서는 민주당은 전체 480석 중 308석을 얻어 54년 만에 여야당 간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은 119석을 얻는 데 그쳤었다.

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갈등은 일본의 수세적 측면에서 나타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 갈등은 모두 일본의 제국주의화 과정에서 잉태된 갈등으로 기본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렇듯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일본은 이미 동북아 위기와 갈등의 핵심에 위치하게 되었다.³⁾

2. 아베정권의 도발

보수 강경의 우파 정치인인 아베의 일본 총리 취임은 2006년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⁴⁾ 첫 번째 총리 재임 시에는 전후 최고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5년 6개월 간 총리에 재임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후임이라는 상황에서 1년 만에 총리 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교육기본법과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⁵⁾을 이루어 일본 보수 우익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주장했던 헌법개정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총리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또 다시 총리에 도전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아베는 그의 가계도⁶⁾를 들추지 않더라도 뻗속까지 우파정치인이다. 그는 작년 9월 14일 자민당 총재선거 공동기자회견에서, “수상이 되면 야스쿠니(靖国) 신사에 참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의 지도자가 참배하고 영령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상재임 중에 참배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며⁷⁾ 우파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결국 그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작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그의 역사인식의 결정판이며, 이는 그가 지난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가와 국가간 관계에서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

3) 김영필, “동북아 위기와 일본의 선택”,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2013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2013. 4. 24), p. 68.

4) 아베는 2006년 9월 26일 만 52세의 나이로 전후 최연소 일본총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9월 26일 참의원 선거 패배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1년 만에 총리 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작년 12월 26일 제96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함으로써 6년 3개월 만에 총리 직에 복귀했다.

5) 2006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는 현재 아베 정권의 보수우경화 길에 자양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6) 아베의 외조부는 A급 전범 출신의 전 총리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이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치인이다.

7) <産経新聞> 2012. 9. 14(<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914/stt12091423530023-n1.htm>)

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⁸⁾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주변국에 대하여 도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아베 내각의 각료 4명⁹⁾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국회의원 168명¹⁰⁾이 집단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아베의 이러한 언동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폭주하는 아베정권의 도발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침략행위 부정에 이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를 완성하려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 정치권이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침탈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알아보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1. 헌법적 근거조차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우리나라와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어느 조항에도 영토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즉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국가의 최고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있는 아베 정권도 헌법 9조와 96조를 개정하겠다고는 해도 영토조항을 헌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토와 관련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일본은 영토문제를 국제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은 중국, 대만과의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문제, 러시아와의 북방 4도 반환문제 등 영토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

8) <서울신문> 2013.4.2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4001009>).

9) 총무상인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가 4월 20일, 부총리인 아소 타로(麻生太郎)와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인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가 4월 21일, 행정개혁상인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가 4월 28일에 참배했다. 이 중 신도와 이나다는 2011년 8월 1일 울릉에 입도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극우정치인이다.

10)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4월 23일에 참배하였는데, 168명은 이 모임이 결성된 198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 참배이다.

는데, 센카쿠 제도와 북방 4도의 문제는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 왔다. 이 두 문제의 시원은 일본이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조약¹¹⁾으로 영토를 편입시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센카쿠 제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센카쿠 제도를 국유화¹²⁾시킨 것도 일본정부였으며, 양국의 전투기가 동원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도 양국의 정부였다. 이렇듯 센카쿠를 둘러싼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정부차원에서 대응하여 왔다.

북방 4도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내각부에 북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정부차원에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아베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 4도의 반환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¹³⁾ 이렇듯 북방 4도의 문제는 양국의 최고 실력자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루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방 4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게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주장인 셈이다.

한편 독도 문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센카쿠 제도나 북방 4도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센카쿠 제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북방 4도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다수 현존하고 있어 회복되어야 할 실지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독도는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고 일부의 어민들을 제외하고는 이해 당사자가 적으며, 무엇보다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도 빈약하거나와 한국이 실효지배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통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11) 북방 4도의 일본영토 편입은 러시아와의 일러통호조약(1855년), 센카쿠 제도의 일본영토 편입은 중국과의 시모노세키조약(1895년)의 결과이다.

12) 2012년 9월 11일 일본의 노다 정부는 센카쿠 제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개인에게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던 도쿄도의 방침에 대해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우려해 정부가 직접 토지를 구입하여 센카쿠 제도 전체를 국유화시켰다. 구입대금은 20억 5천만 엔이었으며 전액 국가예산에서 지출되었다.

13) 2013년 4월 29일 러일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북방 4도의 총 면적을 2등분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으나(朝日新聞 2013년 5월 1일자), 아베 총리는 푸틴의 제안 사실을 부정했다.

2. 시마네(島根)현을 앞세운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이며 시마네현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처음으로 독도를 실효 지배한 것이 일본이며, 그 이전에 독도를 실효 지배한 나라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도 독도는 분쟁 처리사항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도 줄기차게 일본정부에 대하여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 확보를 요망하는 결의를 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100년을 맞이한 2005년 3월 16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찬성다수¹⁴⁾로 시마네현 의회가 가결함으로써 독도 침탈에 대한 본격적인 야욕을 드러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시마네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독도의 영토권을 확립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 정도이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그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시마네현이 취한 행동이었다¹⁵⁾.

또한 시마네현은 독도문제만으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본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과 연계하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독도문제를 북방 4도 문제와 동격화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2〉 시마네현의 독도 침탈 연표

일시	주요내용
1905.02.22	시마네현지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함
1905.05.17	시마네현 독도를 오키노쿠니윤군의 관유지 대장에 등록
1905.06.05	시마네현지사 나카이 요자부로 외 3명에게 독도에서 강제조업 허가
1905.07.22	해군인부 38명 독도에 상륙하여 가설 망표 세움
1905.08.19	시마네현지사 해군함선을 타고 독도 시찰

14) 이 조례안에는 일본공산당 의원 1인과 민주당 의원 1인이 반대했다.

15)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자료실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다케시마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물론 시마네 현민들도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100년을 기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케시마의 존재를 알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고 한다.(2007년 9월 21일 면담)

1953.06.27	시마네현, 해상보안청 공동으로 독도를 조사하고 영토표지를 세움, 한국인 6명에 대해 퇴거명령
1965-1976	시마네현지사 현의회 의장단 연명으로 일본정부에 독도의 영토권 확보 요망
1977.03.19	시마네현의회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에 대한 결의
1977.04.27	시마네현 독도문제해결촉진협의회 설립
1977-1995	독도문제해결촉진협의회 일본정부에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 요망
1982-현재	정부에 중점요망사항으로서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 요망
1987.03.11	독도·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설립
2004.03.15	시마네현의회 국가에 있어서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국가에 제출
2004.10.25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을 국가에 요망
2005.03.16	시마네현의회 본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찬성다수로 가결(일본공산당 의원 1인, 민주당 의원 1인 반대)
2005.03.25	시마네현지사 조례를 공포, 시행
2005.06.21	시마네현 다케시마연구회 발족
2007.04.19	시마네현 독도자료실 오픈
2013.02.22	시마네현 주최 제8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부 대신 정무관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정부대표로 참가

출처: 시마네현 및 독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자료를 기초로 필자작성

한편 일본에서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오키노시마(隱岐の島)정인데 그들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주변에서의 안전한 조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주장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독도주변에서의 안전한 조업이다.¹⁶⁾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변화된 일본의 정치지형을 반영이나 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 본격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독도 침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5일에는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

16) 2007년 9월 22일 오키노시마정 독도문제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과거 독도로 조업을 하러나갔던 사람들 중심으로 참가하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무관심하다고 했다.

실'을 내각 관방에 설치했으며, 2월 22일에 개최된 제8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정부대표로 내각부 대신 정무관인 시마지리 아이코를 파견하여 행사의 성격을 격상시켰다. 이제 독도문제도 정부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아베 정권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인 것이다.

Ⅲ. 일본 정치권의 독도인식

1. 일본 정부의 독도인식

현재 일본의 정부 부처에서 독도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주요 부처는 외무성과 방위성이며, 지난 2월 5일 내각관방에 설치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독도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무성은 기본적으로 독도문제를 외교문제로 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외무성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최근 아베 자민당 정권에서의 변화된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외교청서 2013년판 요지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보이는데,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다."¹⁷⁾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문제를 제소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외무성의 공식적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보고 있는 방위성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일본 국내에서 다른 부처에 비해 그 위상이 위축되어 있었던 방위청이 2007년 1월 9일자로 방위성으로 승격하여 일본 우익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의 총리가 다름 아닌 아베였다. 물론 방위성 승격은 그 이전의 자민당 정권에서부터 시도되어 온 것이었지만 제1차 아베 정권 시절에 승격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17) 『外交青書』 要旨, 2013년 4월, p. 15.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위성이 영토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위성은 매년 방위백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방위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러시아와의 영토문제로 북방 4도문제이며, 우리나라와는 독도문제가 미해결인 영토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한 방위백서를 검색해 본 결과, 1970년에서 2012년까지의 43년간 38번 발행된 방위백서에 독도문제가 언급된 경우는 1978년과 1997년이며, 1999년 이후에는 매년 독도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집중적으로 독도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초 동서냉전이 붕괴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의 55년 체제¹⁸⁾가 해체되면서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방위백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04년까지의 방위백서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북방영토와 독도문제가 영토문제로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백서의 독도 고유영토론 주장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2010년-2012년)의 방위백서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방위성이 2005년도 방위백서부터 주장하고 있는 독도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우경화 노선이 만들어 낸 결정품으로 향후 방위성이 독도주변에 순시선을 파견하여 무력도발을 획책하는 등 실력행사로 나올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내각 관방에 설치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아직까지는 독도문제에 대해 크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영토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처이니 만큼 앞으로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기구이다. 이미 지난 2월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한 것은 향후 이 기구의 역할과 위상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18) 전후 일본의 정당정치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1955년 10월 일본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하여 일본사회당으로 재발족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정당인 일본민주당과 자유당, 진보당이 통합하여 1955년 11월 15일 자유민주당을 발족시켰다. 이러한 보수정당과 혁신정당 간의 대결구도는 1993년 자유민주당 정권이 하야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를 55년 체제라고 부른다.

2.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문제

전후 처음으로 독도문제가 일본 국회에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인데,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본토 주변 도서들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연합국 측과의 협상에 유리하도록 국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언급되었다.¹⁹⁾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국회에서는 1,718회²⁰⁾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독도문제가 영토의 귀속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로도 언급되어지고 있다. 독도문제가 집중적으로 일본의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시기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전후한 시기와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전후한 시기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전후한 시기에는 주로 이승만 라인의 설정, 독도의 귀속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전후한 시기에는 독도의 귀속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더불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으로 독도문제가 일본의 국회에서 언급되는 비중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독도문제는 일본의 국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외교적 과제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미해결 현안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를 전후한 시기의 일본국회에서의 독도문제 논의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본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¹⁾

첫째, 일본의 정치인들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들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점령군인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일본의 정치가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에 로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둘째,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문제해결에 있어서 외교적 해결이라고 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이유는 평화헌법, 미일안전보장조약 등에

19) 시마네현 출신의 중의원 의원 야마모토 토시나가(山本利壽)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독도와 같이 일본의 도도부현에 소속되었던 도서들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점령당국에 대하여 특수사정을 얘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전후 일본 국회에서 최초로 언급된 독도관련 발언이다.

20) 국회의회의록 검색시스템(<http://kokkai.ndl.go.jp>)

21) 김영필,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민주정책연구원, 2011년, pp. 38-41 참조.

의하여 일본의 군사력이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는 등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일본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가 일본령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본의 많은 정치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점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명확하게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걱정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일본정부가 독도가 일본령임을 주장할 때, 그 첫 번째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고 있는 것과는 많은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현상이다.

넷째,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에 있어서 일관되게 평화적,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던 일본정부가 1953년경부터는 국제기관이라든지, 제3국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아마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독도를 한국이 무력점령하고 있으며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당시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 일관되게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로써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틀림없다는 주장과는 상이하게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일본 주요 정당의 독도인식

독도문제는 일본 국내정치상황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외교적 문제이며, 또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일본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왜냐하면 독도문제는 일본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해당사자도 많지 않고, 북방영토에 비하면 일본 국민들의 관심도도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도 1950년대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세력을 확장해온 보수우익 세력이 정치권의 전

면에 나서면서 독도에 대한 정당차원, 정치인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8월 1일 울릉도에 가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했던 자민당 의원 3명이 한국정부의 입국불허로 김포공항에서 되돌아간 사건²²⁾은 독도가 일본 우익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향후 이러한 일본 정치권의 독도만행은 일본 정치권 내에서의 자체 정화기능이 발휘되는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주요 정당들이 독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1)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은 1955년 11월 15일 창당 이래 1993년의 일련의 정치적 변동으로 약 10개월, 그리고 2009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년 4개월간 하야 한 것을 제외하고 일관되게 일본정치를 주도하여 온 정당이다. 때문에 자유민주당의 정책이 일본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자유민주당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여론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독도문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자유민주당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민주당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유민주당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으로 한일 간의 커다란 외교적 현안과제로 떠오른 독도문제에 대하여 2005년과 2006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먼저 2005년 11월 ‘창당 50주년 자유민주당 대회’에서 중점정책으로서 독도문제에 관하여 언급, ‘독도 등은 역사적, 국제적 사실로부터 일본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며, 북방 4도와 독도는 불법적인 점거상태에 있어, 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위신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듬해 5월 16일 자유민주당의 영토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²³⁾가 독도문제에 대하여 정리한 보고서에는 독도문제에 대하여 분쟁의 발단이 된 원인은 1952년의 ‘이승만 라인’ 즉,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

22) 2011년 8월 1일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신도 요시다카, 이나다 토모미, 참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려 했으나 한국정부의 입국 불허방침으로 김포공항에서 되돌아간 사건.

23) 위원장은 중의원 의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로 방위청 장관, 방위성 대신을 역임한 대표적인 방위족 의원이며, 현재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자민당 간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차기 최유력 총리후보이다.

에 있다고 보고,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한국 측은 독도문제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상징처럼 어필하고 있지만, 원래 독도는 한국령이 아니며 식민지 지배로 탈취한 것도 아닌 것으로, 문제의 본질은 19세기 이전의 영유권의 유무에 있으며 식민지 지배와는 무관계다.”²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의 영토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2010년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2010년 10월 1일 정무조사회 산하에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새출발하게 되는데, 위원장이었던 이시바 시게루는 3분 15초 동안의 인사말을 모두 독도문제와 관련된 발언에 할애했다. 이 조직의 위원장 대리는 신도 요시다카, 사무국장은 사토 마사히사로 자유민주당 내 영토문제 전담의 전위조직으로서 이들이 이듬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겠다고 한 행동은 이미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한편,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민주당은 고이즈미 정권 발족 후, 선거공약(매니페스토)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는데, 고이즈미 정권의 최전성기였던 2003년의 중의원 총선거 시의 매니페스토 공약에서는 영토, 영해문제의 해결이라는 항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영토인 북방 4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둘러싼 반환, 영유권 등의 문제해결에 끈질기게 외교교섭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당시는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으며, 고이즈미 정권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시기였기에 독도문제와 같이 표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슈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도 선거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다. 2005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도 독도문제 등이 매니페스토로 언급되고 있었지만, 당시 가장 큰 선거 이슈는 우정사업의 민영화였던 관계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영토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해양권익을 확보’한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제1차 아베 정권하에서 자유민주당이 참패한 2007년 7월 29일 실시의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독도문제 등과 관련된 영토문제가 매니페스토로 책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국내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황에서 영토문제와 같은 표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문제를 공약으로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4) <http://www.jimin.jp/jimin/info/takeshima/index.html>(검색일 2011년 8월 20일)

그러나 자유민주당이 역사적 참패를 기록하며 정권에서 넘겨주게 되는 2009년 8월의 중의원 총선거 매니페스토에 ‘북방영토 문제나 독도문제에는 의연한 태도로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시 독도문제를 거론하였고, 야당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2010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법 점거되고 있는 북방영토, 독도문제 해결에 의연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톤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자유민주당이 정권에 복귀하게 되는 2012년 12월 중의원 총선거 매니페스토에서는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북방영토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교섭을 재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토문제 전담부서의 설치도 매니페스토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자유민주당의 영토문제와 관련된 매니페스토의 흐름과 특징은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 문제와 북방 4도, 독도문제를 분리하기 시작한 것이고,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영토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정부가 북방 4도와 독도에 쓰고 있는 고유영토라는 표현보다 불법점거라는 과격한 표현을 씀으로써 자유민주당 정권하에서 더 강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개연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자유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현재 당과 내각의 요직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자유민주당이 매니페스토에서 주장한 영토전담부서 설치, 러시아와의 북방 4도 교섭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유추한다면 일본의 다음 타겟은 독도이며,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 민주당

1996년 정계재편의 과정에서 당시 일본사회당의 일원과 신당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 구성원 등이 합류하여 만든 민주당은 원내 제3당으로 출발하였으나, 2009년 창당 13년 만에 일본에서 54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집권에 성공하였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평화노선, 아시아 중심의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우호협력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독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민주당이 독도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당의 공식문서 등에는 잘 나와

있지 않다. 또한 독도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해 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굳이 해결을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²⁵⁾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나 자유민주당 등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 독도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2005년 중의원 총선거이다. 이는 그해 3월에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영토문제는 여야당,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보수정당이 주도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민주당도 반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자유민주당의 독도 침탈 전략이 민주당도 움직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총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에 민주당은, ‘북방영토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센카쿠 제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UN해양법조약에 기초하여 “해양권익확보법”의 제정에 노력한다.’고 하고 있다. 이 공약은 민주당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보다는, 일본의 해양권익을 확보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이와 같은 공약을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민감한 영유권 문제와는 다른 현실적인 국익차원의 공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 2009년 중의원 총선거, 2010년 참의원 통상선거의 매니페스토 공약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2009년 총선거시의 정책집에는 ‘영토문제의 해결은 곤란을 동반하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이 있는 북방영토, 독도문제의 빠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대화해 나갈 것이다’며 독도의 영토주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명기했다. 일본 우익들의 주장이 일본민주당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여당으로 치룬 2012년 12월 중의원 총선거의 매니페스토는 자유민주당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인 독도는 한국에 의하여 불법 점거되고 있어 국제법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끈질기게 요구해 간다’하여 자유민주당이 2010년 매니페스토에서 주장한 불법점거라는

25) 2006년 6월 7일 민주당 새도우 캐비닛(shadow cabinet)의 외무대신인 아사오 케이이치로(淺尾慶一郎)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의원단이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영토 문제에 대한 독일 의원단의 질문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그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아사오는 현재 민주당을 탈당하여 모두의 당에 소속되어 있다.

표현을 답습하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생각이 거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의 집권 시기에 총리대신을 역임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 나오토(菅直人),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총리대신으로서 국회에서 독도와 관련한 답변을 한 것은 하토야마가 2회, 간이 4회, 노다가 14회였다.

하토야마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2009년 10월 28일 중의원 본회의)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으며, 간은 “독도는 우리나라 교유의 영토로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2011년 3월 1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고 답했고, 노다는 “독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2012년 3월 9일 참의원 결산위원회)며 기존 자민당 정권을 답습했다. 일본에서의 54년 만의 정권교체의 과실이 독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민주당의 독도문제를 보는 시각을 자유민주당과 같은 시각에서 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3)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일본에서 전후 첫 번째로 만들어진 정당으로 55년 체제 하에서는 일관되게 제1야당이었으며,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헌법을 지켜 온 정당이다. 1996년 일본사회당에서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에도 한국 및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다. 그러나 55년 체제 붕괴 후에 계속된 당세의 몰락과 함께 일본 정계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민주당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평상시에는 그리 문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국과의 영토문제가 불거져 나올 경우에는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식견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민주당의 독도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당시 간사장이었던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는 2006년 4월 21일의 기자회견에서 독도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선, 독도문제가 현안문제화 된 원인에 대하여 당시 일본총리였던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역사인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및 중국 등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발생하였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는 일

본 고유의 영토로써 17세기경부터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으며, 정식으로 1905년에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를 답습하고 있다.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좌파와 우파의 구별 없이 자국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05년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2차 한일조약이 맺어진 연도이기도 하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망국의 결과’일 것이라며 한국인의 입장에 대하여 이해심을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민주당은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짜내어 노력해 온 것처럼, 냉정하게 대응하고, 대화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냉각기간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4) 공명당

공명당은 평화와 복지를 실현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정당으로 현재 자유민주당과 함께 연립여당의 일각을 구성하고 있다. 원래부터 대외적인 문제보다 국내 이슈에 관심이 많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정당으로서 독도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연립여당의 일원으로서 정권에 참여하기 시작한 후에 주변국 정치지도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최근에는 공명당도 독도문제에 대하여 공식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명당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공명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는 2006년 4월 20일 한국의 민주당 한화갑 대표 일행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화갑 대표의 독도문제 언급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혜를 짜내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냉정하게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2006년 4월 26일의 국회 내 기자회견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하여 언급,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문제를 역사문제로서 일본을 비판한 데 대하여, 독도 문제는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닌 영유권의 문제로 정리하여 논의해야 한다.”며 양국이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공명당의 이러한 견해 표명은 당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으로, 이러한 견해를 표명하기 까지는 일본 내 유수의 한국통으로 알려진 게이오(慶應) 대학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교수의 어드바이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²⁶⁾.

한편 작년 중의원 총선거시의 정책집에 영토주권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의연한 대응에 의한 전략적 외교를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명확히 하고, 각국과의 냉정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고 하여 독도문제 등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유연함을 보여 주었다.

5) 일본공산당

일본공산당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으로서, 공산주의 실현을 의회민주주의를 통하여 이룩하려는 정당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산권 국가의 공산당과는 근본적으로 그 지향하는 목표와 실현방법이 다르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입장은 당 기관지인 『赤旗』(아카하타)와 당 간부 등의 발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공산당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일본이 독도를 편입해 가는 과정이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과 중복되며, 이 시기는 사실상 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편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마저 잃어버린 시기라는 역사적 배경²⁷⁾이 있다며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제 위에서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그 인식을 양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작업을 통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근본적인 영유권 문제 해결이전이라도 어업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문제, 독도주변의 해양조사 등 공동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공산당은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절대 군사적 충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⁸⁾.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일한 양국의 긴장을 높이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26) 『公明新聞』 2005년 4월 7일 기사 참조.

27)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공산당의 공식입장으로 '1977년 견해'라고 한다.

28) 『赤旗』 2006년 12월 2일.

좋다고 생각하며, 영토문제의 해결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의 도리에 기초하여 냉정한 교섭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⁹⁾

6) 일본유신회

일본유신회는 일본에서 가장 보수우익의 정당으로 자유민주당의 보수우경화를 견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정당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은 없지만 공동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廣太郎)와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가 각각 구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강경우익인 점을 감안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일본유신회는 자신들의 정책에 북방영토에 대해 러시아와 교섭한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보면, 독도를 그냥 놔 둘리는 만무하다. 아마 신생정당으로 아직 독도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지 못한 것일 것이다. 일본유신회가 자신들의 세력 이상으로 일본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는 정당임에 틀림없다.

IV. 우리의 대응전략

1. 독도의 실효지배 강화

독도를 둘러싼 문제는 해방 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늘 평행선을 달려온 문제였다. 타협의 여지도 없었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문제였다. 정치학적 용어를 빌리면 제로섬(zero-sum) 게임이었다.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도 독도문제가 다루어졌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듯 기본적인 인식이 전혀 다른

29) 2012년 8월 10일 발언.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독도는 한일 간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우선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 하는 문제이다.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띠고 있으나, 현대의 과학적인 시각으로 독도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양국의 주장 모두에 허점이 발견되고, 모순도 존재하며, 비과학적인 면이 상당부분 노출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소재로 한 논의는 양국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도양단식의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를 유용하게 실효지배 하는 것만이 독도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순간 일본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을 동반하기도 할 것이다. 이미 방위성이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독도를 규정한 이상, 선제공격을 가해 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유권 문제로서의 독도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2. 우리의 대응전략

독도의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지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독도를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 간다. 독도의 영유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만으로 한일 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한일 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난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정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결하여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점을 극복하며 상호 간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이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문제인 것이다.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는 일본과의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일본은 우리가 국가발전 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논리를 일본의 논리로서 제압하는 소위 이이제이 전략이다. 일본

에는 독도문제를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극우적인 시각에서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그들 간의 상반된 주장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용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한 목소리가 아님을 강조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확대재생산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독도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일본의 국회속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은 독도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불안해 하였으며, 그러한 불안한 마음은 '이승만 라인'의 설정으로 극에 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결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정치인들과 일본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 국회속기록이라든지 일본정부의 내부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이해관계가 다르다. 외무성은 독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방위성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시마네현이나 오키노시마정은 어민들의 이해관계를 풀어야 할 입장에 있다. 즉, 일본에서의 독도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영유권 문제의 해결로 끝날 수 있으나, 단기적인 면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교류와 우호친선관계의 유지는 독도문제의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대오를 흔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현재 일본의 정당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 전부 우경화된 일본의 정당은 곧 유권자들로부터 폐기 처분될 것이다. 자민당 내에도 양심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해 내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일본의 우경화 노선에 맞서는 전략으로서 유용하다.

다섯째, 독도를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 일본의 의지대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은 일본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독도의 실효지배는 한일 양국 간의 국제적, 외교적 문제해결의 유효한 카드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일본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한국의 통일문

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한일 FTA 문제 등에 있어서 독도문제로 대변되는 역사 인식의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최종 결착을 보려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로 소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일본 왕세자의 장인인 오오와다 히사시(大和田恒)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전략을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는 잘 못 되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여 왔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물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가 제소되었을 때를 대비한 승리논리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떤 논리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불충분하다. 이제는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공명당 홈페이지: <http://www.komei.or.jp/>
 김영필, “동북아 위기와 일본의 선택”,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2013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2013. 4. 24),
 김영필,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민주정책연구원, 2011년.
 사이버 독도 홈페이지: <http://www.dokdo.go.kr/>
 사회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spd.or.jp/>
 『서울신문』
 세리타 켄타로, “다케시마의 한국주권 인정하고, 울릉도 기점으로 EEZ 설정하자”, 『新東亞』 2007년 3월호, pp.466-473.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독도관련 주변국들의 정책실태 조사와 한국의 대응방안』 동북아역사재단. 2007년 11월.
 일본 국회의회의록 검색시스템 홈페이지: <http://kokkai.ndl.go.jp/>
 일본 공산당 홈페이지: <http://www.jcp.or.jp/>
 일본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dpj.or.jp/>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mod.go.jp/>
 일본 시마네현 홈페이지: <http://www.pref.shimane.lg.jp/>
 일본 오키노시마정 홈페이지: <http://www.town.okinoshima.shimane.jp/index.php>
 일본유신회 홈페이지: <http://www.j-ishin.jp>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

일본 자유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jimin.jp>

한영구·윤덕민 공편저,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 I』 도서출판 오름, 2003.

호사카 유지,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불법성 고찰”, 『일본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제23집, 2007년 4월.

『赤旗』

伊藤哲雄, “領土紛争と國家管轄權”, 『國家管轄權: 國際法と國內法』 勁草書房, 1998.

稻葉誠一, “韓國國會における日韓條約論議”, 『法律時報』 第37卷 第10号(通卷 第433号(1965. 9.)).

植木俊哉, “國際機構による紛争の平和的解決”, 杉原高嶺編 『紛争解決の國際法』 三省堂, 1997.

小和田恒, “紛争處理”, 『法律時報』 第37卷 第10号(通卷 第433号(1965. 9.)).

『外交青書』 要旨, 2013년 4월.

金子利喜男, 『世界の領土・境界紛争と國際裁判: 外交交渉と司法的解決の併用を目指して』 明石書店, 2001.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金東祚, 『韓日の和解: 日韓交渉14年の記録』 サイマル出版會, 1986.

清瀬信次郎, “竹島問題とその法律的見解”, 亞細亞大學アジア研究所編, 『アジア研究所紀要』 第23卷(1996.).

『公明新聞』

小林高寿, “竹島の貴族をめぐって(一)”, 『歴史教育』 1965年 10月号.

_____, “竹島の貴族をめぐって(二)”, 『歴史教育』 1965年 11月号.

_____, “竹島の貴族をめぐって(三)”, 『歴史教育』 1965年 12月号.

『産經新聞』

下條正男, 『日韓歴史克服への道』 展転社, 1999.

_____,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2004.

芹田健太郎, 『島の領有と經濟水域の境界劃定』 有信堂, 1999.

_____, 『日本の領土』 中公叢書, 2002.

_____, “竹島を「消す」ことが唯一の解決法だ”, 『中央公論』 2006年 11月号, pp.268-277.

_____, “海洋利用の変遷と島の地位”, 인하대학교 심포지엄 발표문, 2007.

太壽堂鼎, 『領土歸屬の國際法』 東信堂, 1998.

高崎宗司, 『檢證日韓會談』 岩波書店, 1996.

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2007.

_____,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資料編)』 2007.

_____,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CD-R)』 2007.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1965.

特殊法人北方領土問題對策協會, 『北方領土返還運動50年史』 北方領土問題對策協會, 1996.

中川八洋, “竹島不法占據と武力行使の選擇”, 徳間書店編 『サンサーラ』 第7卷 第9号(1996. 9.).

- 松本健男, “尖閣諸島と竹島問題の正しい解決: 侵略政策の歸結としての認識が必要”, 『社會評論』第23卷 第2号(1997. 1.).
- 森川幸一, “竹島(獨島)問題の機能的解決へ向けて”, 檀國大學・專修大學共同 세미나, 『專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月報』第408号(1997. 6.).
- 森川俊孝編 『紛争の平和的解決と國際法』北樹出版, 1981.
- 原田敬一, 『日清・日露戦争』岩波書店, 2007.
- 福田博, “解説 日韓條約: 基本條約.” 『法律時報』第37卷 第10号(通卷 第433号(1965. 9.)).
- 廣部和也・田中忠, “資料: 日韓會談一四年の軌跡”, 『法律時報』第37卷 第10号(通卷 第433号(1965. 9.)).
- 村瀬信也, 『國際立法: 國際法の法源論』東信堂, 2002.
- 村常男, “日韓條約の調印と今後の日韓關係”, 『世界週報』No. 1022, 1965年 9月.
- 森田芳夫,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兩國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外務省調査月報』No. 5, 1961年 5月.
- 吉井淳, “領域歸屬に關する紛争と國境劃定紛争: 國際裁判による領域紛争の處理, その機能と限界”, 杉原高嶺編, 『紛争解決の國際法』三省堂, 1997.
- 吉岡吉典, “「竹島問題」とはなにか”, 『朝鮮研究月報』No. 11, 1962年 11月.
- _____, “再び「竹島問題」について”, 『朝鮮研究月報』No. 16, 1964年 4月.

Abstract

Recognition of Japan politics about Dokdo and our strategy

Kim Young-Pil*

Last December, the Abe government came back, and it is critical core of Northeast Asia. They visited to Yasukuni Shrine, denied to Korea's invasion and they are denying all of their invasion history. I'm afraid they want to take Dokdo.

Dokdo is Korean territory, but Japan politics assert it belongs to them. To make matters worse, they are waiting an opportunity to inv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 blue paper and Ministry of Defense white paper have claime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and many right wing politicians are taking part in the Cabinet.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is becoming more right wing politicians than before by Japan Restoration Party, and the others also have more right wing ideologies. It can't control Japan right wing political parties. They finally aim to take Dokdo.

In this situation, we have to defend Dokdo. Japan must be very important partner for our nation's development. But it is necessary to trust between two countries.

Dokdo is effective controlled by Korea. It is the best way how to keep Dokdo. During Dokdo is effective controlled by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imited Dokdo's ownership. Now we don't have any way to keep Dokdo except more effective control.

We have strategies about Japanese claim of Dokdo's ownership as

* Master of the JSP research, Waseda University, Japan, Ph.D of the LDP research, Kanazawa University, Japan. He is a Director of Korea-Japan Peace Assemblyman Committee.

follows.

First, we can overpower Japan right wing politics as Japan conscientious force's ideology.

Second, Japan politics say to Dokdo's ownership is based on The San Francisco Treaty. But it is not right.

Third, we have to exchange a lot of local government and civic society in Japan.

Finally, we must prepare thoroughly to bring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